

시론



김 선 기
전남도립대 웰니스학과·문학평론가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우~ 우~ 풍경/ 우~ 우~ 풍경’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의 한 소절이다. 이 곡은 반복되는 단순한 구절 속에 깊은 철학을 담고 있어, 질서의 회복이나 삶의 균형을 상징하는 노래로 자주 인용된다.

그렇다. 오랫동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돌아오는 것’이다. 듣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이 노래는, 우리가 있고 살았던 ‘제자리’라는 말의 의미를 되묻게 한다.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 각자의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 그 정적이지만 단단한 질서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아름다움이 아닐까.

2024년 12월3일, 우리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 일명 ‘12·3 내란 사태’는 현정 질서를 부정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전대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문의 사건이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이 오히려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는 민의를 철저히 왜곡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다.

검찰은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치의 공작자가 됐고, 정보기관은 외부의 위협보다 내부의 반대를 억누르는 도구로 변했다. 언론은 스스로 침묵하거나 아첨을 선택했고, 국회는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됐다.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지던 시절. 진실은 왜곡되고, 상식은 조롱받았으며, 사람들은 점차 말문을 닫았다.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이 다시 입에 오르내렸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역사의 반작용은 시작됐다. 부정과 파괴는 순간이지만, 회복과 재건은 끈질긴 믿음과 연대에서 비롯된다. 시민은 기억했고, 저항했고, 투표했다.

2025년 6월3일,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되찾아온 과정의 결과였다. 물론 ‘완벽한 정상화’라고 말하기 어렵다. 여전히 시스템은 왜곡된 흔적을 지우지 못했고, 구조적인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정부 출범 이후 사회는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다. 무너졌던 공공의 가치가 다시 복원되고, 잊혔던 민생의 언어가 정치의 중심이 되고 있다. 또한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단지 수사적 장식이 아니라 실천의 과제가 됐다.

검찰권의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 경찰과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부의 독립성 회복은 그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과 재정 분권, 교육개혁과 기후정책,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등은 오랜 시간 뿌리내린 불평등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긴 여정의 일부다. 그것은 하나의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로잡고,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이 아름다운가. 필자는 이제 단언할 수 있다. 혼란 속에서 하나씩 제자리를 되찾아가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가 목격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회복의 시간, 그 소중한 장면 안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다. 민주주의는 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증명의 현장 한가운데 서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시민과 촌장의 노래 ‘풍경’이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이유다.

자치칼럼



이 용 연
한국마을자치연구소 대표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새정부 국정과제를 다듬고 마무리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들을 국민주권정부가 5년 동안 실천할 국정과제로 정리하고 있는 데, 그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주민자치 실질화이다.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 분야의 공약으로 ‘자치분권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는 현재의 단순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주민총회 등 마을행사 개최, 주민참여예산 검토, 위탁사무 수행 등 읍면동의 자치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권한과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반갑다.

2013년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고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주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 실질화해야

자치회는 2023년까지 전국 3천533개 읍면동 중 39%인 1천388개소에 설치돼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활발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 반역사적 퇴행으로 여러 민주적 정책들처럼 중단과 폐지의 뒷걸음질을 쳤다.

지난 12·3 내란 사태와 대선 기간 동안 전국 풀뿌리 마을운동가와 전문가들은 ‘전국풀뿌리리자치행동네트워크’를 구성해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확대와 관련된 12개 정책과제를 민주당 등 각 정당에 제안했다. 특히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는 ‘주민자치회 실질화 관련 조문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안부 등과 심도 있게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오는 8월25일에는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국회 토론회를 갖고 병합 심사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도 96개 동 4천여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지지하고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해 힘을 보탬 예정이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때 여야간의 이견으로 주민자치 관련 규정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후 주민자치회는 미흡한 지방분권특별법과 각 자치단체의 개별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다 보니 정권과 자치단체장의 정치 편향과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부침을 겪고 왜곡 및 중단되기 일쑤였다. 이번 지방자치

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아 주민자치의 법제도적 기틀을 완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9개의 관련 법안과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의 주민대표기구로 읍면동 사무소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회를 제도적으로 시군구 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의무사항이 되도록 해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기조가 읍면동 풀뿌리 거버넌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강조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회를 의무 설치하고, 읍면동 전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기구로 위상을 명확히 규정한다. 주민자치회의 기능도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마을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위임·위탁사무 처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제안 사항들은 현 주민자치회가 이미 실천하여 마을 현장에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사안들을 입법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마을현장에서 성숙한 주민의식으로 발전한 주민자치를 지방자치법에 명확히 담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견고하게 하고, 자치적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독자투고

교통문화의 발전은 단순한 법률적 조치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와 문화 변화를 반영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체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교통문화의 정립은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운전자, 보행자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예기치 않게 발생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상상

교통질서 확립,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이상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교통법규 준수에서 시작된다.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준수하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등 각자의 정해진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질서의 확립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서로 배려하

는 운전습관과 반칙운전 행위 신고 등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자율적인 교통질서준수 문화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급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행위인 ‘5대 반칙운전 행위’의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김희정·순천경찰서 경비교통과〉

112 허위·거짓 신고 삼가야 하는 이유

행후 112 허위·거짓 신고를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나 경범죄 처벌법상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다. 또한 상습적으로 허위·거짓 신고 등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온 경우에는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112 신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통로이니 허위·거짓·장난 전화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삼가야 한다.

〈김대원·함평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팀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집권 민주당 정청래 체제, 호남 정치력 강화 계기로

민주당 정청래 새 대표가 첫 일정으로 텃밭 호남을 방문했다.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정 대표는 전남 나주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호남의 발전을 위해 뭔가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6월 대선 당시엔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 운동을 이끌었고, 이번 전대 기간에도 수해 피해 복구에 매진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8·2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총득표율 61.74%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권리당원의 30%를 차지하는 호남권 역시 60% 이상을 획득했다. 강력한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이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도 검찰·사법·언론 3대 입법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다시는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내란 세력의 척결을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겠다”며 “승리를 위한 열쇠는 더 공정한 경선을 보장하는 일이며 억울한 컷오프는 없애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민주당도 성공하며, 민주당이 성

공해야 이재명 정부도 성공한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다.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인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험한 일, 굵은 일, 싸울 일은 앞장서서 술선수해야겠다고 한다.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개혁 속도전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민에서 국회법 제사법위원장과 탄핵소추위원단장으로 활약했다. 국민들의 뜻도 같다. 집권당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경쟁자인 박찬대 후보와도 정치적 동지로서 ‘안 헤어질 결심’이다. 운명 공동체인 당·정·대가 원팀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결의가 굳건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민주당의 발전에 독보적으로 기여한 호남이다. 정 대표가 각별한 공을 들이는데는 이유가 분명하다. 정치력의 강화를 위해서라도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현안을 건의하는 창구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도 호남인들은 힘을 보탬 것이다.

20년 만의 전국체전 성공 개최 잠재 역량있는 광주

광주시가 2028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광주체육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유치에 성공한다면 20년 만에 전국체전이 펼쳐진다. 다만 시설 개보수와 운영비 등 약 65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이 관건이다. 국가보조금법 시행령에는 운영비 50%, 시설비 30%까지 가능하며, 현재는 운영비 40억~60억원, 시설비 최대 200억원 등을 정액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육회는 직접경제효과 1천111억원, 생산유발 2천172억원, 취업유발 2천614명 등 경제파급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2028년 전국체육(장애인)대회, 2029년 소년(장애학생)체전, 2030년 생활체육대축전이 연이어 열리게 된다면 8만4천여명의 선수단과 임원, 학부모, 일반 관람객을 포함해 3년간 총 유입 인원은 최대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내놓은 수치다.

광주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굵직한 국제대회까지 최고의 호평을 받으며 스포츠도

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2015하계유니버시아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오는 9월 2025세계양궁선수권 열기도 고조되면서 흥행을 예약하고 있다. 또 전국체전은 지방 최초로 1951년 제32회를 시작으로 2007년 88회 대회까지 6차례나 진행한 경험을 축적했다. 20년 만의 유치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은 것으로 다른 시·도의 여건에 비교해서도 한 발 앞서 있다. 체육인들의 공통적인 건의가 매우 타당한 셈이다.

그렇다고 해도 예산상의 부담을 무시할 수는 없다. 9월 말까지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광주시의회 의장 확보서도 포함해야 하는 만큼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전국체전 개최 예정 도시와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는 제안이 합당하다고 하겠다. 계획대로면 대한체육회는 11월 중 현장실사 및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중 이사회에서 개최지를 최종 선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스포츠 축제를 준비하는 광주의 도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침물어는 詩

뛰어오는 비

성정현



운동장이 비를 초대했어

비비비비가 물놀이까지 해
비비비비비가 동글동글 웃고 있어

걸어오던 비가

운동장이 보이자
뛰기 시작했어

빗물 놀이터가 된 운동장

비가 운동장을 달려

비비가 그림을 그려

비비비가 노래를 불러

저기,

B가 뛰어오고 있어

b도 뛰어오고 있어.

(동시집 ‘뛰어오는 비’, 정개구리, 2022)

[시의 논]

B·b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동심주체를 두 개의 기호로 상징화한 것이다. 운동장을 달리고, 그림을 그리고, 물놀이를 즐기고, 동글동글 웃음 날리고 원시적 동심주의를 바탕으로 간 비 오는 운동장, 그 시간간은 동심의 삶과 동일시된 역동적 속결로 가득 채워져 있다. 대지적 상상력의 운동장, 물의 상상력의 비,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시의 화면은 생동감 있는 동심 축제로 활기를 띠고 있다. 빗물 놀이터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누가 과연 이 축제를 피하랴. 동심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이 정면을 그냥 지나칠 것인가. 비를 초대한 운동장이 축축이 젖어 동심을 부르는데. 자연의 대표적 물질인 물은 시인의 영혼에 강렬한 영감을 불러넣는 매력적인 질료이다. ‘비가 운동장을 달려/ 비비가 그림을 그려/ 비비비가 노래를 불러/ 비비비비가 물놀이까지 해/ 비비비비비’ 이 대목에서 동심을 소환하는 놀라운 물의 상상력을 만나게 된다. 연속적으로 포진된 작은 동심 카니발에서 비가 자연발생적인, 상급발달한 동심의 원형적 모티프란 것을 발견하게 된다. 축축한 화면 속으로 동참을 원하는 순수 생명체들이 기꺼이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이다. 〈윤상현·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 업 본 부	650-2007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신문료인 강령 및 그 실현요건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